특검, 윤석열 부부 소환 통보

〈김건희 특검〉

윤석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김건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김건희 특별검사(특검)가 공천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직접 불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소환 통보에 나섰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29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로 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김건희 여사에게도 8월 6일 오전 10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문홍주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수용돼 있는 서울구치소에 협조 요청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다만 내란 특검 때와 마찬가지로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관해서는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할지 그때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재구속 후 3차례 인치를 지휘했지만,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물리력까지 행사하기는 어렵다며 서울구치소 측이 난색을 표하며 집행되지 않았다. 특검은 구속 적부심이 기각된 후 대면 조사가 성사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추가 소환 시도 없이 지난 19일 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조사가 이뤄지면 윤 전 대통령 부부 모두가 연루됐다는 주장이 나온 공천개입 의혹부터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 당시 명태균씨에게서 공짜 여론조사를 받아보고, 그해 6월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전략공천되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김 여사가 같은 해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남도지사·강원도지사 공천에 개입했으며, 김상민 전 검사를 위해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김 여사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3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김 여사 측은 건강 상태 악화 등을 이유로 검찰청에 나오지 않았다.

김 여사 측은 검찰이 범죄 사실을 구성할 때 공천과 대통령 직무 사이의 연관성에 관해 상반된 논리를 적용했다는 취지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일부 혐의에 관해서는 공천이 대통령의 직무라고 하고, 다른 혐의에 관해서는 직무가 아닌데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논리를 적용했다는 것이다.

김 여사 측은 해당 의견서에 여당의 공천은 대통령의 직무가 아니기 때문에 검찰이 적용한 개별 혐의 자체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담았다.

문 특검보는 김 여사를 상대로 공천개입 의혹 외에도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건진법사 전성배씨 청탁 의혹 등에 관해서도 김 여사를 직접 불러 조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 측은 기본적으로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특검이 이날 보냈다고 밝힌 출석 요구서가 김 여사 측에 아직까지는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이 다수라는 점에서 하루에 조사를 마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여사를 상대로 한 추가 소환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뉴시스

'상생의 약속,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김관영(사진 왼쪽에서 두번째)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2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농가소득·재생에너지 두 마리 토끼 잡는다

민주 윤준병 의원,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21일, 농지에서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법'을 대표발의했다.

기후위기 대응과 농가소득 증대를 동시에 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 것이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은 농작물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 관련 법률이 없고, '농지법'에 따른 '타용도 일시사용허가'가 최대 8년으로 제한돼 발전설비 수명(평균 25년)과 맞지 않아 사업 확대에 걸림돌이 되어왔다.

이번 제정안은 허가 기간을 최대 30년까지 늘리고,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특구' 지정, 전기 자가소비 우선 보장, 송·배전설비 연계 지원, 이격거리 규제 완화 등도 포함됐다.

윤 의원은 "영농형 태양광은 농민과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실질적 대안"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햇빛연금' 실현을 위해 조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농업과 재생에너지를 결합한 새로운 농촌경제 모델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만호 기자·정읍=김대환 기자

"새만금, 재생에너지 메카로 성장시키는데 혼신"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취임

김의겸 제7대 새만금개발청장 취임식이 21일 새만금개발청에서 열린 가운데, 김 신임 청장과 관계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김의겸 제7대 새만금개발청장은 21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앞서 임명 발표에서 김의겸 신임 청장은 지역 협력과 홍보 소통, 정책 경험 등을 기반으로,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기반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국가산업단지 중심지로 육성하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할 적임자라고 평가받았다.

김의겸 청장은 취임식에서 "고향에 가서 열심히 일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에 따라 이 자리에 서게 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가슴이 벅차면서도 어깨가 무겁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서 김의겸 청장은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아 새만금을 재생에너지의 메카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일 것이며, 당장 새만금에 RE100 산단을 유치하는 일에 집중할 것"을 강조하면서, "또한, 새만금은 개발만으로는 이뤄지지 않으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해수유통, 생태계 복원 등을 통해 온 국민이 사랑하는 새만금이 되도록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겠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업무를 신속히 파악하여 새만금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선 국회, 대통령실, 정부 관계기관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의겸 신임 청장은 군산제일고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한겨레신문 기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 등을 지냈고, 제21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이만호 기자

"3대 법안 국회 계류… 전북형 유보통합 모델 마련 위해 노력을"

도의회 유보통합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업무보고 청취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유보통합 추진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정희 의원)는 21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제5차 회의를 통해 유보통합 추진 관련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 자리에는 박정희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과 도청 복지여성보건국 황철호 국장을 대신해 양수미 사회복지정책과장이 도교육청은 윤영임 교육국장과 관계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양수미 도 사회복지정책과장은 이날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및 특색사업, 유보통합 자료개발지원단 구성 및 운영, 교육청 직원 지자체 파견(도청, 군산, 익산, 완주 각 1명), 유아 급간식비 격차 완화 지속 지원, 유보통합추진협의회, 관리일원화추진단 회의 운영 등에 대해 보고했다.

윤영임 도교육청 교육국장은 영유아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하여 상향평준화 기반 조성, 유보통합 추진 협의체와 전담팀 중심으로 교육청으로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마련, 전북형 보육업무 지원자료 개발,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 대상 4대 역량강화 연수, 개정 표준보육과정 현장지원자료 개발 지원, 전북형 유보통합 모델 마련 정책 연구사업"등 추진 상황을 보고했다.

윤 국장은 "현재 새정부 유보통합 관련 방향 제시가 없는 상황으로 유보통합과 관련한 3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새정부의 유보통합 정책 방향을 면밀히 주시고 있다"라면서 유보통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박정희 특위 위원장은 "현재 영유아가 매우 급감하고 있는 상황으로 유보통합이 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통합과 관련해 서로 어려운 점만 부각하는 것은 걸림돌"이라면서 소통을 강조했다.

그는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북형 유보통합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다른 지역보다 선제적으로 그리고 더 특색있는 모델을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만호 기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 개정 조례안, 남원시의회 통과

남원시의회 강인식 의원이 발의한 남원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73회 남원시의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하며 시민 안전체계 구축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남원시는 화재 발생 시 시민의 신속한 대피와 인명 피해 최소화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기존 공공기관 중심의 방연마스크 비치 범위를 대폭 확대해, 어린이집,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재난 취약계층 이용시설까지 비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방연마스크 사용법과 화재 시 대피 요령에 관한 안전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필요 시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도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려는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의 이름으로 진실 요구한다"

임종명 도의원, 남원시민과 '채상병 2주기 성명' 발표

"한점 의혹 없는 진상규명 철저… 끝까지 지켜보겠다"

남원 시민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종명 의원(남원2)은 2023년 급류에 뛰어들어 국민을 구하다 순직한 故 채상병의 2주기를 맞아 추모식을 가지고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임종명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채상병 순직 사건은 권력이 국민의 생명을 외면하고, 진실을 은폐하려 한 국가기강 유린 사건"이라며, "이는 단순한 개인의 희생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임 의원은 "채상병 특검은 단 한 줌의 권력 눈치도 보지 말고 한 점 의혹 없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전원 처벌을 해야 한다"며, "남원 시민들은 끝까지 이 사건을 지켜 볼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 시민들은 성명에서 "남원의 이름으로 진실을 요구한다"며, "정의는 결코 죽지 않으며,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해 왔으며, 채상병의 희생 역시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이라며 연대와 행동을 예고했다.

남원은 민주, 노동, 통일의 가치를 실천한 고장으로, 4·19 혁명의 불꽃을 지핀 김주열 열사, 노동자의 권리를 외쳤던 이석규 열사, 민족의 자주와 평화를 염원한 김양무 열사를 배출한 지역이기도 하다.

한편, 남원 시민은 해병대전우회와 함께 7월 19일 대전현충원 묘역 추도식에 참석했다.

/이만호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도의회 경산건위·농복환위, 현장의정활동 펼쳐

경산건위, 전주 에코17블록 공공주택 건설 현장 등 찾아

농복환위, 남원 고랭지작물 시험장 찾아 정책 수요 청취

21일 현장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사진 왼쪽)와 농업복지환경위원회(사진 오른쪽).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대중)와 농업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임승식)가 21일 현장의정활동을 펼쳤다.

먼저 경제산업건설위원회는 전북개발공사에서 추진중인 전주 에코17블록 공공주택 건설사업 및 고창 덕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추진현황을 청취하고, 현장을 점검·시찰했다.

먼저, 위원회는 전주 에코17블록 공공임대주택 건설현장을 찾아,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과 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이어서 방문한 고창 덕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현장에서는, 인구유입에 대비한 정주기반 마련과 도시 기능 회복을 위한 개발사업의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현장 실태를 점검했다.

경제산업건설위원회는 이번 현지의 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건설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 필요성을 다시금 확인하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업복지환경위원회도 남원시 운봉읍에 위치한 도 농업기술원 고랭지작물시험장을 방문해 고랭지 작물의 기후변화 대응 연구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현장의 정책 수요를 청취했다.

이날 현장에는 임승식 위원장을 비롯해 권요안 부위원장, 국주영은·김정수·오은미·오현숙·이정린·황영석 의원 등 농복환위 위원 전원과 전문위원실 관계자들이 함께했으며, 농업기술원장과 자원식물연구소장, 고랭지 작물시험장장 등 10명의 관계자와 함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시험포장을 둘러봤다.

위원회는 시험장 관계자로부터 △고랭지 사과 및 상추 품종 육성 현황 △곤달비 영농형 태양광 재배기술 실증 △기후변화 대응 고도별 생육관측 시스템 구축 등의 연구성과를 청취하고, 연구시설과 재배시험지를 직접 점검하며 고랭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위원들은 이날 일정 중 한국전쟁 당시 남원시 주천면 덕치리 노치마을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의 현장을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만호 기자